

스미싱·파밍 느는데 대책은 “알아서 조심”

광주·전남 을 1300여건에 피해액 7억원 넘어

#A씨는 친구에게 4만원을 보내 려고 자신의 컴퓨터로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갑자기 화면이 깨져 접속했다. A씨는 얼마 뒤 “받지 못했다”는 친구 연락을 받고서야 다른 은행 계좌로 199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 지난달 13일 광주동부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토요일 결혼식 잊지 말고 축복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웨딩 사진첩’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클릭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20만 571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참석해야 할 결혼식이 있는데, ‘웨딩 사진첩’이라고 해 무심코 눌렀다가 뒤늦게 ‘스미싱’으로 불리는 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 광주광산경찰에 8월 신고했다.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 사기애 당국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피해 구제 받기도 쉽지 않아 적극적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일정 금액이 소액 결제로 빠져나가는 스미싱은 907건(피해액 1억원)이 발생했다. 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도 올 들어 9월 말까지 55건이 발생해 3억 10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전남청도도 들어 발생한 351건의 스미싱 사건으로 입은 피해액이 5300만원에 이르고 같은 기간 57건의 파밍 사건도 발생해 피해자들이 3억 5760만원을 빼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뿐 아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경찰청의 ‘스미싱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182 건(5억6900만원)에 불과했던 스미싱 범죄는 올 7월까지 1만8143건(35억

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핵심 피의자 검거나 피해 구제는 쉽지 않다.

스미싱이나 파밍 사건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주적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설령 IP주소 등을 알아내도 해외에 있는 범인 검거가 쉽지 않아 인출해 등 ‘꼬리’만 잡는 게 고작이다.

광주청의 경우 이를 들어 발생한 파밍 사건 중 36건에 대해 ‘대포통장’을 빌려온 혐의를 적용, 처벌률을 뛰어며 전남청도 57건의 파밍 사건 중 5건(6명)만 검거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개인 책임이라는 이유로 금융권에서 피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스미싱은 경찰서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등에 제출하면 배상 받을 수 있는 반면, 파밍 사건은 금융기관들이 개인 과실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범인에게 스스로 개인정보를 알려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은행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데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은행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인 형편이다.

또 금융 당국이 최근 300만원 이상 금융 거래로 본인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 생활이지만 피해 보상 대책은 빠져 있어 현재로는 개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김현 의원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 적극적 예방 활동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D사가 평소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입찰 관련 정보를 건네받는 등 사업 상 편의를 얻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11일 광주·대전 점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D사의 광주 본사 및 대전법인, D사 대표 문모씨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

장부를 확보했다.

장부에 오른 접대 대상자들은 20여 명 선으로, D사는 70여차례에 걸쳐 이 업소에서 이들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른바 ‘2차’로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사가 평소 용역 입찰과 관련된 센터 공무원 등을 상시 관리하

려고 이 업소를 지정, 지속적으로 접대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소는 D사 측으로부터 ‘손님 몇 명이니 잘 해 드리라’는식의 연락을 받으면서 D사와 관련된 매출 내역을 따로 기록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또 센터 공무원들에게 일정 액의 현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D사가 평소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입찰 관련 정보를 건네받는 등 사업 상 편의를 얻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11일 광주·대전 점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D사의 광주 본사 및 대전법인, D사 대표 문모씨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뇌물수수 혐



따뜻한 밥상 나누기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 등 115명이 14일 광주시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공원을 찾은 어르신 500명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나눠 주고 있다. 이날 ‘따뜻한 밥상 나눔 행사’는 북구청·북구대한적십자사·삼성전자 주최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고처리 하던 운전자 2명

도로에서 버스에 치여 숨져

교통사고로 정차한 차량 주변에서 사고 처리를 하던 운전자 2명이 군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지난 13일 오후 6시50분께 강진군 강진읍 S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모(50)씨가 운전하는 군내버스가 도로에 서 있던 박모(68)씨와 김모(30)씨를 치었다. 박씨와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와 김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을 세워놓고 사고 처리를 하던 중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있던 김씨의 사고차량을 피하느라 앞쪽에 있던 김씨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술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2만원 흠진 좀도둑에 수십 배 벌금

○·심야시간 비 어있는 상가를 뜯며 현금 2만원을 흠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벌금을 물 혐의.

○·14일 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 9월26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A왕족발집을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흠진 뒤 인근 건물 근로자 대기소에 침입했다가 훔친 물건이 없어 나오던 중 바로 옆 마트 주인 한모(여·65)씨에게 발각됐다는 것.

○·경찰은 김씨가 현금 2만원을 흠쳤다가 수십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될 처지에 놓였다면 혐의를 끌끌.

/김용희기자 kimhy@kwangju.co.kr

‘성빈여사’ 후원금 유용 감사

광주시 동구, 주내 경찰 수사 의뢰 방침

광주시 동구는 14일 아동보호시설 인 성빈여사가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불법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성빈여사 측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식품 등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동구는 또 불법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는 성빈여사 측이 후원금 기부처와 후원금 지출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몰카’ 의사

목포 모 종합병원서 ... 진료실에 설치 간호사·환자 특정부위 찍어

목포경찰은 14일 자신의 진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간호사와 환자의 특정 부위를 찍어온 혐의를 받는 여성 환자의 치마 아래부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

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 범행에 사용했으며 환자와 간호사를 찍을 때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

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몰래 카메라를 부수는 등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점에 주목, 진료실과 속소 등에서 암수한 컴퓨터에 대한 분석을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4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4대강 총인시설 공사

뇌물받은 감리원 검거

4대강사업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 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감리원과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체인 G사는 총인처리시설에 납품하는 여과기 부품의 감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감리원 배모(47)씨에게 3000만원을 빼냈다.

G사는 또 공사 브로커 최모(55)씨에게 165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G사는 광주지역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부품 등을 수령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용도	비고
소재지 및 면적 [m ²]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2013년 경 14727	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0, 202동 18층 아파트	134,000,000 원	
17085	1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4 두암2차무등파크 맨션 202동 2층 212호	84,000,000 원	

[단지주택, 다가구주택]

2013년 경 14991	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7-49번지 [현: 풍암동 59번지]	134,000,000 원
2013년 경 14992	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77-49번지 [현: 풍암동 59번지]	134,000,000 원

[방법]

2013년 경 16532	1	광주광역시 동구 동강역 684-1 357㎡	39,490,690 원
2013년 경 16532	1	광주광역시 동구 동강역 684-1 357㎡	39,490,690 원

[내지/임야/전답]

2013년 경 17361	1	광주광역시 동구 동화면 96-22 8971㎡	77,784,200 원
2013년 경 17361	1	광주광역시 동구 동화면 96-35 31㎡	77,784,200 원

[부동산/부동산/부동산]

2013년 경 14444	1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450-13 725㎡	401,304,000 원
2013년 경			